

국제법<선택>

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(행정)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A 국 국적의 X 선박은 B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 중이던 C 국 국적의 Y 어선에 연료를 판매한 후 자국으로 항해를 시작하려다 B 국 국적의 Z 어선과 충돌하였다. 충돌사고로 Z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이 사망하였다. 이러한 상황을 통보받은 B 국 해양경찰은 항공기를 출동시켜 공해상에서 도주하고 있던 X 선박을 발견하고 무선으로 정선명령을 하였다. X 선박이 이에 응하지 않자 B 국 해양경찰은 고속정을 출동시켜 공해상에서 X 선박을 추적 및 나포하고 선장 등 관련자를 B 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원에 기소하였다. 선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공소장에는 X 선박이 B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료를 판매한 사실과 선박충돌로 선원이 사망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. A 국은 B 국의 기소가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15점)

- 1) B 국 법원이 X 선박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UN해양법협약상 적법한지 검토하시오. (10점)
- 2) B 국 해양경찰이 X 선박을 추적 및 나포한 것이 UN해양법협약상 적법한지 검토하시오. (5점)

제 2 문.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UN 회원국인 A 국, B 국, C 국, D 국, E 국 등 5개국은 UN헌장에 의거하여 군사동맹을 목적으로 하는 ‘태평양 공동방위기구’(이하 ‘방위기구’) 설립조약을 체결하였다. 방위기구 설립조약이 발효된 후 K 국은 방위기구의 회원국인 E 국에 친(親) K 국 정권을 수립할 것을 목적으로 E 국 내의 반군세력에게 무기와 자금 그리고 병력에 대한 체계적 군사훈련을 제공하였다. 이에 대해 방위기구는 다수결로 K 국의 행위를 침략행위로 결의하였다. 이 결의에 따라 B 국, C 국, D 국은 ‘BCD 다국적군’을 구성하였다. 이후 방위기구의 군사참모위원회 지휘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던 ‘BCD 다국적군’은 A 국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K 국 국적의 민간선박에서 E 국의 반군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와 탄약을 발견하고 그 선박을 포격하여 격침시켰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15점)

- 1) K 국의 군사적 행위가 UN헌장상 금지된 무력사용행위인지 논하시오. (5점)
- 2) ‘BCD 다국적군’의 K 국 국적 민간선박 격침행위가 국제법상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인지 논하시오. (10점)

제 3 문. X 국과 Y 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A는 과거 X 국에서 고문을 받았다. 그 후 A는 Y 국에 거주하면서 과거의 고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X 국에 요구하는 소송을 Y 국 법원에 제기하였다. Y 국 「국가면제법」은 국내법원이 타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권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, 고문과 같은 인적 손해의 경우 면제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. A는 고문금지규칙이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서 주권면제규칙에 우선하므로 X 국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. 그러나 Y 국의 항소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X 국에 면제를 부여하였으며, 대법원도 상소를 각하하였다. 이 사안에서 A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. (단, Y 국은 ‘UN 주권면제협약’ 당사국이다) (20점)

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